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국세청이 꼽은 주요 Q&A

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중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까지 단 하루라도 5억원을 넘긴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라면 해당 계좌정보를 오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신고방법은 홈텍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홈텍스 신고시 환율 조치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가 연계되어 있다.

잔액 산출방법은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 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해 산출하는 식이다.

미(과소) 신고자의 경우 과태료(미·과소신고 금액의 10% ~ 20%)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년 신고 종료 후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 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나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면 된다.

관세청, 수출기업 애로 해결 위한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 시행

관세청이 물류지체 해소와 신속통관 지원, 행정제재 완화, 세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세정지원 강화에서는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납부 대상기업과 한도를 확대하기로 밝혔다. 현재 납기연장은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이지만, 이제는 최장 1년으

로 연장한다. 대상기업도 '성실 중소·중견기업'에서 '성실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한도도 한시 폐지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 내였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신청을 즉시 지급한다. 만약 수출 일정이 늦어질 경우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의무기간을 연장한다.

현재 수출이행기간은 2년이다. 이제는 3년으로 확대하지만, 플랜트 수출물품에 한해서 적용된다. 관세조사도 유예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관세행정 지원대책은 즉시 시행된다. 환적화물처리장소(CTA) 지정 및 관세조사 유예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출입물류 해소를 위해 피해 사실을 접수받는 '수출입물류지원센터'를 전국 6개 세관에 운영한다.

이에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입물류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지방소비세율 7% 인상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재정분권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 방향을 논의한다.

홍영표 특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을 7%포인트 인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확인한 뒤 관련 법안의 당론 발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분권 계획은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회의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 등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